

■ 환경부 '제주 제2공항 조건부 협의' 찬반측 극단 논평

“건설 신속 추진” vs “주민투표 하자”

환경부가 6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도내 제2공항 찬반 단체들이 잇따라 논평과 성명을 발표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촉구 범도민연대와 성산청년 희망포럼은 이날 논평을 내고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를 많은 주민들이 적극 환영하고 있다”며 “보완이 필요한 환경적 요인이 세밀하게 검토돼 다음 절차까지 순조롭게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범도민연대는 “국토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절차를 진행해 제2공항 건설이 신속하게 추진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찬반 갈등을 넘어 제주의 미래를 견인할 제2공항에 대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도 같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상공회의소는 6일 환경부가 발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제주상의는 “현 제주국제공항 포화로 인한 혼잡과 안전사고 위험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 절차인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길 요구한다”며 “제주도는 중앙정부 절충을 통해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도민사회 갈등과 혼란 해소에 적극 나서고,

지역 균형발전과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이날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도민은 진실과 과학을 외면한 환경부의 정치적 결정에 부동의한다”며 “국토부 2중대를 자임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상도민회의는 또 “국가 환경보전이라는 부처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파기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당장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했다.

비상도민회의는 “8년째 계속되

고 있는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유일한 도민결정 방식은 주민투표”이라며 “오영훈 도지사는 스스로 강조해 온 도민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국토부에 제2공항 주민투표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사랑·민중사랑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도 성명을 내고 “제2공항 건설로 인해 다수의 도민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제2공항 문제를 도민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제주도지사와 국회의원, 그리고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제2공항에 대한 도민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도영기자

해경 마약수사대 신설 '마약과 전쟁'

기존 마약수사반 확대... 해상 반입 적극 대응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해상 마약범죄 적극 대응을 위해 마약수사대를 신설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를 대량으로 밀수입 또는 밀반입하는 등 마약 범죄가 대형화되고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과 해양수산 종사자들의 유통·투약 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제주해경은 지방청 중심으로 전담 마약수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광역수사대 마약수사반을 마약수사대로 확대·신설 운영하고 있다.

제주해경은 지난 2021년부터 마약사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최근 2년간 필로폰을 투약하고 유통한 어선원 총 5명을 검거해 구속한 바 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기존의 필로폰과 코카인에서 최근 케타민 등 신종마약 유통이 급증해 마약 행위 자뿐만 아니라 전담책 등 뒷선까지 광범위하게 수사를 벌여 마약범죄를 뿌리 뽑을 계획”이라며 “집중적으로 단속해 안전하고 청정한 제주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영기자

미분양주택 해소 민관협의체 구성

도 “시장 동향·정보 공유하며 대응방안 논의”

지난 1월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은 1780호로 지난해 10월 1722호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제주시 967호, 서귀포시 813호이며, 읍면지역 미분양 주택은 1250호로 전체 미분양주택의 70%를 차지한다.

1월 기준으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698호이며, 지난해부터 600~700호 대를 유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처럼 미분양 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다각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

도는 지난 2월 17일 유관단체·기관과 관계 전문가, 시·도 행정기관

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미분양 주택 해소 등 주택시장 안정화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매월 정기 회의를 통해 도내 주택시장 동향과 입주예정 물량 정보 등을 공유하고, 사업 주체 자구책 마련, 공급조절 방안 등 시장상황에 맞는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해 시행할 방침이다.

미분양 주택 현황 통계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 중이거나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해 매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후 분양계약일이 지난 단지를 대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물량을 조사해 집계한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새봄 소풍 나온 노루 가족 화사한 봄날씨를 보인 6일 제주시 제주마방목지에서 노루 무리들이 여유롭게 새싹을 뜯고 있다.

강희만기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예산 남는데...

서귀포시 올해 10억7000만원 투입... 대상자는 43명
정부 수요조사 없이 지원해 매년 집행률 10%대 그쳐

성인 발달장애인(만 18~65세 미만)의 주간활동비를 지원하는 국비가 수요조사 없이 내려오면서 매년 예산 집행률이 1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이뤄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규모는 20명에 대한 1억4446만원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인원 3명, 예산액 3억880만원, 집행액 618만원(집행률 1.5%) ▷2021년 인원 6명, 예산액 3억9394만원,

집행액 3861만원(집행률 9.8%) ▷2022년 인원 11명, 예산액 7억800만원, 집행액 9965만원(집행률 14.1%) 등이다. 이처럼 매년 지원 대상자는 10명 안팎이며 예산집행액도 10%대를 보이면서 수요공급면에서 사업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인원은 소폭 늘고 있으나 예산은 급증하며 그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어 문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인 지역 내 등록된 성인 발달장애인(2022년 기준 945명)의 35%가량(330명)이 직장을 다니거나 주간보호시설에 있는 분들로서 해당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는 시간적인 면이나 사업 중복적인 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또한 정부에서의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한 적절한 국비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10억7000만원을 투입해 성인 발달장애인 43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교육청 올해부터 초·중·고 대상 연 2시간 이상 약물예방교육

올해부터 제주지역 초·중·고에서는 연 2시간 이상 유해 약물 예방교육이 이뤄진다.

6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유해 약물 예방 교육 강화는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SNS나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마약류 등 유해 약물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호기심에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서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전국에서 처음으로 올바른 약물 사용과 마약류 등 유해 약물 예방을 내용으로 초·중·고등용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해 각급 학교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부했다.

그동안은 7대 안전교육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 실시됐지만 약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하거나 흡연·음주 중심의 교과 연계 수업에 그치는 편이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고산신협 2022년도 종합경영평가

“2연속 대상 수상”

2022년도 종합경영평가 2연속 대상은 조합원님과 함께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2023년도 한 해도 든든한 동반자 **고산신협**이 조합원 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고산신협 임직원 일동